

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 본격화

“협력이익공유제 원용 가능”...통합 화두 연결

사회적 투자시 대기업 규제 완화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내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 정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기마저 불평등한 모습”이라며 “이제 위기가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공식을 깨려는 담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시대에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업종·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피해가 큰 업종이나 계층과 자발적으로 공유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가전 활동을 누린 삼성, SK, LG 같은 대기업이나 카카오페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비대면 기업들이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인천신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협력이익공유제의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그런 방식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협

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 등으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사회적 투자를 통해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대기업에 대해 공정위 표 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 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 공유제는 여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의 ‘통합’ 의제 중 하나다. 연초 제안한 사면론에 이어 조만간 발표되는 ‘신복지체계’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국민 통합을 위한

코로나 불평등 해소가 앞으로 이낙연표 정책 브랜드가 될 것”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복지제도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완화와 관련해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영업손실 보상제도’나 코로나 시대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온종일 돌봄 확대, 필수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적극 재정’ 기조도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충분한 재정 여력을 확보했고, 이제 적극적 재정으로 그간의 준비가 빛을 발하도록 할 시기”라며 “추가적 재난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등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중대재해법 관련 소상공인 지원...업체당 600만원”

이낙연 “코로나 양극화 조기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낙연 대표와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소상공인 인프라 구축에 업체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안전보건 관련 컨설팅을 받을 경우 자부담 (70%) 비용을 면제하고 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경영지원 바우처도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하는 중대재해법 교육 콘텐츠를 이수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를 10% 할인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지역상권활성화법, 간접결재활성화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방역수칙 설정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생활방역위원회에 소상공인이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대상이 된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과 소상공인 바우처자금의 신속한 집행도 요구했다.

홍 의장은 이에 대해 “지역상권활성화, 간접결재 관련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정해 야권과 협의해나가겠다”며 “소상공인 추천 전문가가 중대본에 참여하는 문제도 중대

본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당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보상할지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바우처자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설 이전에 90%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 가중을 포함해 코로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가 깊은 상처를 안은 채로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외교부, ‘부정 채용’ 주나이지리아 대사 고발

외교부가 이인태 주나이지리아 대사를 직원 부정 채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대사가 대사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사는 2019년 대사관 직원을 통해

채용했다는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제기됐다.

이 직원은 현지인 여직원에게 성추행 논란으로 지난해 9월 자진 사직했으며, 이후 외교부는 두 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직원도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여의도 클락

이용빈 ‘5·18 예우법’ 재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유가족의 범위와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은 심사 보류된 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용빈 의원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5·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대로 정하고, 이들을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 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이미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급전적 생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용빈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법안의 핵심내용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지난번 법안 심의과정에서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발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다시 이뤄져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민주 “檢, 권고안 수용안해...셀프개혁 한계”

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5개 분야 과제 설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개혁 특위 4차 회의를 열고 “검찰이 셀프개혁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질타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위가 총 39건의 권고안을 발표했다”며 “각 개혁위가 의미 있는 권고안을 제시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왼쪽에 전 칼로 오른팔을 자를 수 없다는 드라마 대사처럼 검찰은 스스로 개혁하는 것에 인색했다”며 “솔절대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대검 어디에서도 반성 목소리가 없다. 일선 검사의 수사와 감사를 방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그간 법무부·검찰의 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들을 중심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라임사건에서 보듯 직제개편을 통해 직접 수사를 못 하게 한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듯하다”며 “대검 내부규정과 달리 반부패부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

로 일부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황윤하 의원은 “탈원전 수사를 한 대전지검 형사5부가 이전에 공공수사부였다. 이름만 바뀌 달았지 하는 일은 똑같지 않느냐”며 “직접 수사를 축소하려면 인지사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관사찰 의혹 자료를 공판부에서 했다면 다른 문제가 됐겠지만 수사정보담당관실에서 수집했다. 이름을 바꾸고 인원이 약간 줄었는지 모르지만 뭐가 달라졌느냐”며 “‘는 가리고 아웅’ 식의 개혁을 해 왔던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탄희 의원은 “검찰 내부 비직제부서를 폐지하는 권고를 했는데, 폐지보다는 양성화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직제개편을 고민한다면 직접 수사 검사만 떼어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모두 사법통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앞으로 과제를 ▲ 수사·기소 본리의 로드맵 설정 ▲ 검찰 인사 및 직제 개편 ▲ 검찰 조직문화 및 수사관행 개선 ▲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개혁과제 ▲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조치 점검 등 5가지로 설정해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야외 결혼식
▶ 칠순잔치
▶ 체육대회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